

☪ 이공계 교차지원 축소 및

가산점 권고 방안 마련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3월 1일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주재로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여성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14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 대입 교차지원 허용 범위를 축소하고 자연계열 학생이 이공계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 부여를 권고하며 대학들의 추진 실적을 대학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한 병역특례 대상자 500여 명 확대와 복무기간 단축 등을 위한 추진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이공계 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과 국비 유학 기회를 늘리고 이공계생이 진출하는 연구소 보수 수준을 인상하는 방안 등도 논의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4월 9일 대통령 주재 인적자원관계장관회의에서 다시 보고되며, 최우선 추진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대학과의 MBA과정

공동운영 계획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 3일 국

내 대학들이 추진 중인 외국 대학과의 MBA과정 공동운영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2년 이상으로 못 박고 있는 석사과정 이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석사·박사과정은 각각 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연간 30주 이상을 수업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국내에서 학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다. 외국 대학의 MBA과정은 2년 과정 외에 1년 6개월, 1년 8개월 등 단기과정도 있어 국내법이 개정되고 국내 대학이 단기과정을 공동운영 할 경우 1년 6개월만에 외국 MBA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외국 대학원 국내 유치 지원 계획이 발표된 이후 12개 대학이 외국 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한 공동 학위제 추진계획을 밝혀 왔다. 이 중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세대, 부산대,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이화여대 등 9개대가 MBA과정 공동운영 계획을 밝혔다. 서울대의 경우 미국 스탠퍼드대, 하버드대, 와튼대, 듀크대, 컬럼비아

대 등과 MBA과정 공동운영을, 연세대 경영대학원은 워싱턴대와, KAIST는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UCLA 등과 MBA 공동운영 계획을 갖고 있다.

☪ 해외 명문 공대 입학 내년부터

5만 달러 지원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분야의 해외 일류대(이공계 전공)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 1백 명을 선정, 2003년부터 한사람 당 5만 달러를 지급하는 "대통령 과학장학생"제를 실시키로 했다. 체영복 과학기술부 장관은 3월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체 장관은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IT) 등 융합 기술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원 대학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앞으로 5년간 과학기술예산 35조 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는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지도(NTRM)를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립대 시간강사료 7,000원

인상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도 국립대 전업 시간강사에 대한 시간

당 강사료를 올해 3만 4,0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7,000원 올리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3월 10일 밝혔다. 국립대 전업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사료는 올해도 지난해의 2만 7,000원(연구비 4,000원 포함)에서 3만 4,000원으로 7,000원 올랐다. 이에 따라 사립대 시간 강사료의 동반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추산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의 시간강사는 4만 4,646명으로 전체 대학 강의의 38.4%를 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박사 학위를 가진 전업 시간강사는 9,197명, 박사 학위 미소지자 중 전업 시간강사는 1만 5,000여 명이다. 이에 앞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시간강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립대 교수 정원을 매년 1,000명씩 총 2,000명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고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각종 복지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이공계 대학생 학비지원 및 병역 특례업체 졸업제 폐지 검토

정부는 이공계 대학 진학 기피와 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학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병역 특례업체 졸업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업자원부는 3월 1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신국환 장관 주제로 "산업기술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등록금 부담이 큰 사립대의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학자금 일부를 보조하고 졸업 후 산업체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재 8년 기한인 병역특례업체 졸업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전문연구요원(석·박사급)의 의무 근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산업기능요원(학사급)과 똑같이 3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 기업이 병무청과의 협의를 통해 병역특례 정원 가운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비율을 자체 조정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대학원대 입지규제 해지 요청

경기도가 건설교통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 귀추가 주목된다. 3월 15일 도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1월 17일 수도권외의 인구 및 산업집중 억제에 대해 대학원대학을 수도권내 입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학부과정 없이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원대학을 수도권 입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수도권내 산업-전문대학의 입학 정원 증원 허용 범위를 전년도 전국 입학 정원 총 증가 수의 20%에서 10%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내 택지조성사업 허용 범위를 현행 6만㎡에서 20만㎡로 확대, 조정하고 서울, 인천, 경기 3개 광역자치단체 단체장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위원에서 제외키로 했다.

☞ 국립대 외국인 교수 100명 초빙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과 2003년 2년간 연간 100명씩의 외국인 교수를 국립대에 채용하기로 한데 이어 외국인 교수 1인당 연봉을 평균 10만 달러(1억 3,000만 원 상당)로 책정했다고 3월 17일 밝혔다. 외국인 교수 초빙분야는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외국인 교수 수혈이 시급한 6대 전략분야

와 기타분야 중 외국인 교수가 필요한 분야(기초학문 등) 등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상반기 중 24개 일반 국립대, 11개 교대, 8개 산업대, 방송통신대 등 44개 국립대로부터 외국인 교수 초빙 계획서를 접수받아 대학별 지원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인 교수에 대한 연봉은 정부와 대학이 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봉 10만 달러를 기준으로 50%인 6,500만 원까지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인 교수 연봉 10만 달러는 현재 국립대 전임강사 연봉이 3,000만~4,000만 원, 정교수의 연봉이 5,000만원 안팎인데 비해 과격적"이라며 "미국 내에서는 정교수 연봉이 전공분야에 따라 6만~20만 달러로 다양하지만 10만 달러 정도면 평균선은 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별 지원 규모는 대학이 채용하려는 외국인 교수의 수준이나 전공분야, 대학 자체적인 외국인 교수 지원 프로그램, 수강생 수준이나 강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계획이다.

◀ 전파분야 인력양성

500억 원 투입

정보통신부는 오는 2006년까

지 5년간 5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전파분야 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통부는 전파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전파공학'을 전공과목으로 개설하는 대학에 실험실습 장비구입 비용·장학금·교수요원 확충 비용 등을 지원하고, '전파전문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산·학·연 연계 대학 교과과정 개발 및 공동연구·국제협력을 지원키로 했다고 3월 19일 밝혔다. 정통부는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오는 2006년까지 전파 관련 대학 총 15개교를 선정, 교재개발·실험실습장비·교수요원 확충 등에 3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 당 20억 원씩 지원하되 올해 10개교, 내년에 5개교를 각각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정통부는 2006년까지 총 110억 원을 투입해 '전파전문교육지원센터'를 설립, 산업체 인력 수요 및 국내외 기술 동향 등을 분석한 뒤 산·학·연 연계 대학 교과과정 개발은 물론 대학간 공동연구 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 전자문서유통 ASP 서비스

오픈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대학 및 소속기관,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문서유통 ASP 서비스

가 오픈 했다. 이로써 각 대학 및 교육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전산센터에 설치된 ASP 서버를 활용, 인터넷을 통해 전산센터에 접속해 전자문서 유통에 필요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미지 및 스크린 캡처가 방지되고 문서유통 서버에 접속하는 사용자가 빔 부처 전자서명 인증 체계(GPKI) 방식으로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보안 성능도 우수하다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설명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시스템 구축으로 각 대학 및 관련 기관의 문서 수발 업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졸자 취업 실태 공표제

시행 추진

대통령 자문 교육인적자원 정책위원회는 4월 3일 각 대학 졸업자의 전공·계열별 취업률을 매년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위원회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 대학이 매년 전공·계열별 취업 실태를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객관적인 취업을 산정 기준을 마련, 대학의 자발적 취업을 발표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대졸자의 취업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9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때 취업 관련 조사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통계청과 협의 중이다. 그러나 취업률이 낮은 기초학문 전공분야의 취업률까지 일괄해서 공개토록 할 경우 기초학문 기피 현상을 부채질할 수 있고 취업률에 따른 대학·학과별 서열화 현상을 낳을 수 있어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와 아울러 교육인적자원 정책위원회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쌓은 지식·기술 등 경험 학습 결과를 대학이 평가·인증해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평생학습 체제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는 모든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 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해 학술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을 4~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 내 대학의 특화 분야에 따라 도서·학술지를 분담해 구입한 뒤 서로 빌려 보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여성 연구인력 지원 확대

교육인적자원부는 우수 여성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올해 동안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통해 여성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4월 4일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술진흥재단의 ▲박사후 연수과정지원사업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 ▲신진연구인력 장려금 지원사업 ▲보호학문 지원사업 등 4개 지원사업 분야에서 여성 연구인력의 수혜 비율을 2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과기부에서는 4월 11일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채용 확대를 위한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우선 법안에 여성 과학기술인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평등화조치 규정을 담아 여성 과학기술인의 채용 비율을 오는 201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리려는 채용목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은 또 초·중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이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각급 고등교육기관이 과학기술 관련학과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교원시험 가산점

10%대로 축소

이르면 올해부터 초·중등 교원임용 1차 시험의 가산점 비중

이 축소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월 5일 현행 교원임용 시험에서 1차 시험(필기) 총점(100점 만점)의 15%까지 주고 있는 가산점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가산점 비율을 1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개정안'을 마련.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시험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 지역 시·도 소재 교육대 출신자와 사범대 출신자에게만 주어지는 가산점이 상당폭 줄어 타 지역 교대 출신이나 비사범대 출신에게 교직 문호가 확대될 전망이다. 임용시험 가산점은 초등의 경우 동일 지역 교대 출신에게 5~8점, 국가유공자 2~3점, 토플 등 어학 점수로 1~5점 등을 주고 중등은 사범대 졸업자에게 5점, 복수전공자나 부전공자에게 2~7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필기시험에서 동점자가 많아 가산점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중등은 사대 출신자 가산점, 초등은 출신 지역 가산점이 사실상 당락을 좌우해 왔다.

☞ IT학과 신설 고교·대학에

2005년까지 1,060억 지원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10만 명의 IT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IT학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확대하는 고교 및 대학(원)에 2005년까지 1,060억 원을 투입하는 등 IT인력 종합육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가전략분야 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초학문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4년까지 매년 1,000억 원씩 3년간 총 3,000억 원을 투입, 기초학문의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4월 10일 이상주 교육인적자원부 총리 주제로 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였다. 정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3만 1,000명의 IT인력이 부족했고, 향후 5년간 9만 9,000명이 추가로 부족할 것으로 보고 IT인력 수급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올해 IT학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확대하는 고교 및 대학(원)에 2년간 3억~15억 원을 차등 지원하는 등 올해 510억 원을 포함해 2005년까지 총 1,06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 200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계열별 교차지원 모집 계획
전국 177개 4년제 대학(11개

교대, 가천의대, 방송대, 탐라대, 한국정보통신대, 한동대 제외)을 상대로 조사해 4월 14일 내놓은 '200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계열별 교차지원 모집계획 현황'에 따르면 정시모집을 기준으로 2003학년도 계열별 모집 인원은 ▲자연계열 11만 7,550명(전체의 46.3%) ▲인문계열 10만 6,356명(41.8%) ▲예·체능계열 3만 192명(11.9%)으로 나타났다. 또 자연계 학과의 모집 비율은 46.3%로 인문계보다 4.5%포인트 높아 올 대입 전형에서 자연계 학과 경쟁률이 인문계보다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02학년도 자연계 모집 인원이 45.6%, 인문계 43.5%, 예·체능계 10.9%였던 것과 비교할 때 인문계 비율은 줄고, 자연계 및 예·체능계 비율은 증가한 것이다. 자연계 모집 인원 가운데 ▲조건 없이 교차지원 허용 모집 인원은 33개교 8,730명(7.4%) ▲교차지원을 허용하지 않고 선발하는 인원은 40개교 3만 3,547명(28.6%) ▲교차지원 조건부 허용 모집 인원은 109개교 7만 5,273명(64.0%)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문계 및 예·체능 모집 단위는 조건 없이 교차지원을 허용하는 비율이 각각 42.7%(4만 5,429

명)와 62.7%(1만 8,925명)로 자연계 교차지원 허용 비율 7.4%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올 대입 모집계열별 경쟁률은 자연계가 1.52대 1로 인문계(3.51대 1)와 예·체능계(3.64대 1)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 '이공계 대책' 내달 발표

정부는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을 마련,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4월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 35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우수한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현상은 교육제도상의 문제와 함께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리는 특히 "연구업적과 능력이 탁월한 산업계·학계·연구계의 과학기술인을 '국가과학기술인'으로 선정, 대통령이 인증서를 수여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해 우수 과학기술인의 공적을 기리고 대덕연구단지에서 '창조의 전당'을 건립해 산학연 과학기술 교류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연구개발 예산을 내년에 정부 일반회계의 5%까지 늘리고 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과학 연구 예산을 5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동백업센터 2004년 구축

공공부문 정보화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부처간 정보시스템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정보자원 관리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보화 사업도 물적 인프라 구축에만 치중하고 있어 일반교과 수업에 정

보통신 기술을 반영하는 등의 실질적 정보화 교육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국무조정실과 정책평가위원회는 4월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공공부문 정보자원관리 실태와 교육정보화 추진 실태 정책평가 보고회’를 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재난 발생에 대비, 공공분야 전산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도록 2004년까지 공동백업센터를 구축하고, 범정부적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공공데이터센터(PDC)를 신설하

기로 했다. 또 정보자원의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가칭) ‘공공정보 기술관리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방침이다. 교육정보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 교육과정에 정보기술을 이용한 학습부문을 명시하도록 하고 교육대학 및 사범대 등 교원양성 과정에서부터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작년까지 교육정보화 사업에 1조 4,000억 원을 투입한 데 이어 2단계로 올해부터 2006년까지 3조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